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for Improvement of Young Farmers Fostering Support Policy

김진진¹

Jin Jin Kim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교양학부¹

이소영^{2*}

So Young Lee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²

¹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 Fisheries, Jeonju 54874, Korea

²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 Fisheries, Jeonju 54874,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satisfaction level for the improvement of the young farmers fostering support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urrent policy to foster young farmers is important. However, the actual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ject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e importance level. In the 'Keep up the Good Work' area, which is the first quadrant, 'a project to support young succession farmers and settling in farming' and 'a project to select and support succeeding agricultural managers'. It was found that the respondents highly evaluate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Young Succession Farmers Selection and Farm Settlement Support Project' and the 'Succession Farmers Selection and Support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project in the future.

Key words : Young farmer,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Young Farmers Fostering Support Policy

Received July 07, 2022
Revised July 12, 2022
Accept July 14, 2022

*Correspondence
So Young Lee
lsy2000@af.ac.kr

서론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 농가인구 및 농가당 경지면적이 감소함과 동시에 향후 100만 농가의 붕괴가 예상된다. 농림어업총조사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농가 수는 2015년 108만 900 농가에서 2020년 103만 5000 농가로 4.9% 감소하고, 농가인구 또한 256만 9000명

에서 231만 4000명으로 9.9% 감소하였다. 농가당 경지면적도 1.2ha에서 1.08ha로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으로 간주되는 20대~30대의 감소가 지속적이다. 전체 농업인 중 청년 농업인(20~30대) 비율은 2010년 14.0%이었으나, 2020년 11.4%로 나타났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소멸도 예상되고 있어,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감소 및 지역소멸의 속도를 늦추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핵심은 인구 유입을 통한 청년 농업인 양적 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청년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과 관련한 정책이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농고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영농특성화과정) 운영, 청년 창업농의 정착을 유도하기 소득 보전 정책(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 후계농 육성정책(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귀농·귀촌 및 정착지원정책 등이다. 각각 지원정책의 성과는 매년 지원받은 농업인의 숫자를 통해 측정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정성적인 효과는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강혜정, 2017; 마상진&김남훈, 2019)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김기홍, 2016;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하는 등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한 규범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청년 농업인의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정책 전개 및 주요 지원사업을 다원적,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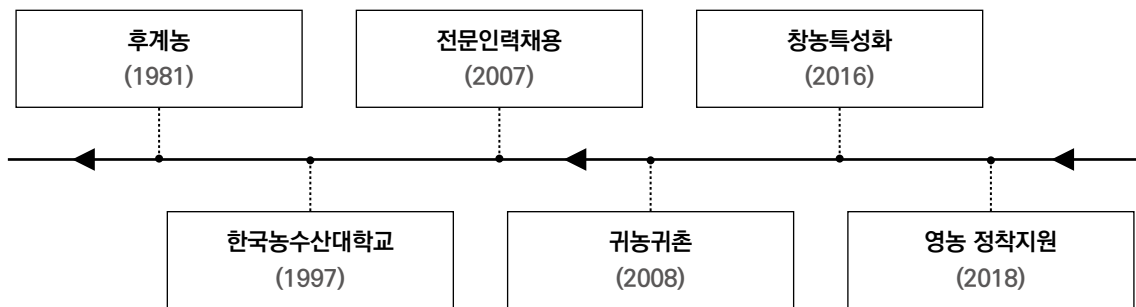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 중심의 정성적 평가를 하여, 향후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정책지원 분야를 파악하고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 정책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IS 분석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청년 농업인 확대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방향 제시는 다양한 맞춤형 영농 정착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 현황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의 전개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은 초기 중앙정부 중심에서 현재는 지자체를 포함한 농업 관계기관의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은 1978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처음 시행한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까지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사의 주요한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을 시계열로 파악하면 Fig. 1과 같다.



자료 : 각 연도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Fig. 1. Time series development of young farmers fostering support policy(based on implementation year)

첫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정부가 농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197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의 목표는 영농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과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농업인(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149,134명을 선발하였고 3,527,964백만 원을 지원

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특징은 연령제한의 상향조정¹⁾과 정책자금의 지원액이 확대²⁾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다. 농업 교육 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에 설립되었다. 개교한 이래로 2022년 현재까지 6,4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의 약 83.6%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성공적인 농업정책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졸업생들의 평균 농업소득은 약 8,000~9,000만 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일반 농가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농업경영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전문 인력을 농업경영체에서 채용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조직체로써,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거점도축장, 들녘경영체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은 우수인력의 농식품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영농경력을 쌓은 후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귀농·귀촌에 관련된 지원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증가한 귀농·귀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2015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계별(관심-실행-정착)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귀농·귀촌인은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현재 귀농·귀촌 사업의 영역이 지역 기반 정책, 일자리·복지 정보제공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95개 시·군·구)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농업교육 과정 운영이다. 대표적으로 영농창업 특성화사업을 들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반대학 재학생들의 농업 분야 청년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거점 대학 5개(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연암대)를 선정하여,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이다. 저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청년의 실업률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 부처별로 청년창업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2018년부터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창업농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영농창업 활성화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 농업인 주요 지원사업

앞에서 살펴본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지만, 정책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지, 경영컨설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Table 1). 우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으로 구분되는데, 청년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업은 ‘청년창업형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업은 ‘귀농·귀촌 정착’과 관련된 사업이다.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지원사업’은 창업농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지원한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한다. ‘후계농업 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일정 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거나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 등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주택구입 및 신축(증·개축 포함) 등을 지원한다.

1) 본 사업의 해당 나이는 1978년 사업 시행 당시 최초 30세 이하에서, 2013년부터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 사업 초기의 정책자금 지원액은 최대 2억 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2022년 현재는 정책자금 금리는 연 2%로 동일하나 지원액은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되었다.

Table 1. Major polices for young farmers(2021)

구분	사업명	담당부서 (시행기관)	사업규모 (백만원, 명)	주요내용
농업인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지원사업	경영인력과 (각 지자체)	48,133 (1,800명)	영농 초기 농가 경영비 및 생활 안정 자금 지급(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경영인력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농협)	375,000 (3,000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최대 3억,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경영인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00,000	귀농 농업창업(최대 3억,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및 주택구입 지원(75백만 원 이하)
농지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	771,785	청년농·귀농인 맞춤형 농지 지원, 농지 매매, 장기임대차
	경영 실습 임대농장	경영인력과 (한국농어촌공사)	9,000	시설(온실) 임대·임차, 농업 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 제공
경영컨설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경영인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613	맞춤형(일반, 심층) 경영 컨설팅,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자료 : '2021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고하여 재작성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들 수 있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고령 은퇴, 상속·이농 등으로 인한 유휴농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청년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 대상자에 따라 농지 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등으로 맞춤형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경영 실습 임대농장' 사업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온실)농업 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된다.

경영컨설팅에 해당하는 사업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경영체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연구방법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년 농업인의 육성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의 시계열적 전개 및 주요 지원사업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실증

분석을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50부이며,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109부(72.7%)이다.

분석방법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은 ISA(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이다. ISA는 Martilla와 James(1977)가 개발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Tonge와 Moore(2007)가 수행도(Performance) 대신 만족도(Satisfaction)를 측정지표로 사용한 분석 방법이다. 본래 IPA는 경영의 마케팅 분야에서 평가대상의 속성을 중요도(Importance)와 수행도(Performance)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각 평가대상의 상대적 중요도와 수행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Martilla and James, 1977). 그러나 수행도는 공급자 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경험의 질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관점에서 수행도 대신 이용자의 만족도(satisfaction)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onge and Moore, 2007). 이러한 관점에서 ISA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곽승진 외, 2011)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정책의 이용자인 청년 농업인의 정책 이용 만족도를 중심으로 IS(Importance-Performance)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2차원에 교차하여 4분면으로 표현되며, 각 분면은 '유지(제 I 사분면)', '집중(제 II 사분면)', '저순위(제 III 사분면)', '과잉(제 IV 사분면)'으로 나타낸다(Fig. 2). '유지(제 I 사분면)' 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아 평가 대상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집중(제 II 사

분면)' 영역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저순위(제 III 사분면)' 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평가대상의 우선순위가 낮아도 무방한 영역이며, '과잉(제 IV 사분면)' 영역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불필요한 과잉 요소의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제 II 사분면	제 I 사분면
집중(Concentrate Here) : 높은 중요도 - 낮은 만족도	유지(Keep up the Good Work) : 높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제 III 사분면	제 IV 사분면
저순위(Low Priority) : 낮은 중요도 - 낮은 만족도	과잉(Possible Overkill) : 낮은 중요도 - 높은 만족도

자료 : Tonge and Moore(2007)참조하여 재작성

Fig. 2. Matrix schematic of IS(Importance - Satisfaction)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84.4%)의 비중이 여성(15.6%)보다 높으며, 연령은 30대의 비중(5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조부모가 농업인 즉, 농가 출신자(76.1%)가 많으며, 창업농이나 가족농보다 승계농(39.4%)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N=109)		빈도(%)
성별	남	92(84.4)
	여	17(15.6)
연령	20대	35(32.1)
	30대	55(50.5)
	40대	19(17.4)
농가출신여부	농가출신	83(76.1)
	비농가출신	26(23.9)
경영유형	승계농(영농승계)	43(39.4)
	창업농	33(30.3)
	가족경영	33(30.3)

영농특성

응답자들의 영농특성은 (Table 3)~(Table 6)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농업종사 이유를 파악한 결과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위한 것'의 비중(42.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출신 여부에 따라 농업종사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농가 출신은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위해 (49.4%)', 비농가 출신은 '농업 전망(경제적)이 좋아서 (37.0%)'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출신 여부에 따른 농업종사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reasons for agricultural work based on the origin of farm households

농업종사 이유	구분	농가출신여부(빈도, %)		합계	χ^2 통계량 (P-value)
		농가출신	비농가출신		
농업 전망(경제적) 좋아서		27(31.8)	10(37.0)	37(33.0)	10.280 (0.016)**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위해		42(49.4)	5(18.5)	47(42.0)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		10(11.8)	7(25.9)	17(15.2)	
기타		6(7.1)	5(18.5)	11(9.8)	
합계		85(100.0)	27(100.0)	112(100.0)	

주 : *** $p < 0.01$, ** $p < 0.05$, * $p < 0.1$

경영유형에 따른 농업종사 이유도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승계농의 경우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위해(55.8%)'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농의 경우 '농업 전망(경제적)이 좋아서(42.4%)', 가족경영의 경우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위해(51.5%)'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승계농과 가족경영의 경우 창업농에 비해 어릴 때부터 농업환경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영농동기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위한 것으로 형성되었다고 파악된다. 창업농의 경우 경제적 전망 외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농가 출신 승계농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경영유형에 따른 농업종사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reasons for agricultural work according to management type

농업종사 이유	구분	경영유형(빈도, %)			합계	χ^2 통계량 (P-value)
		승계농	창업농	가족경영		
농업 전망(경제적) 좋아서		13(30.2)	14(42.4)	8(24.2)	35(32.1)	13.605 (0.034)**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위해		24(55.8)	6(18.2)	17(51.5)	47(43.1)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		4(9.3)	8(24.2)	5(15.2)	17(15.6)	
기타		2(4.7)	5(15.2)	3(9.1)	10(9.2)	
합계		43(100.0)	33(100.0)	33(100.0)	109(100.0)	

주 : *** $p < 0.01$, ** $p < 0.05$, * $p < 0.1$

응답자들은 농업경영에 있어서 '자금확보', '노동력', '농지 확보', '판매망 확보', '생산기술', '농업 관련 교육 기회 부족' 순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특히, '자금확보', '노동력', '농지확보'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경영의 기초생산 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경영유형별로 농업경영의 어려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승계농은 '자금확보', '농지확보', '생산기술', '농업 관련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창업농과 가족경영보다 어려움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모의 농업경력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농업에 대한 초기진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농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생산요소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생산요소 간의 결합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노동력을 둘러싼 기술, 교육 등의 경험적 요소가 농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5.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ifficulty in agricultural management according to management Type

구분	경영유형	전체평균	평균±표준편차	F-value (P-value)
자금(시설, 운영비) 확보	승계농(N=43)	4.37±0.920	4.26±1.049	1.250 (0.291)
	창업농(N=33)		4.30±1.015	
	가족경영(N=33)		4.58±0.561	
농지 확보	승계농(N=43)	4.34±1.020	4.14±1.146	1.988 (0.142)
	창업농(N=33)		4.33±1.021	
	가족경영(N=33)		4.61±0.788	
생산기술 확보	승계농(N=43)	3.30±1.221	3.23±1.212	0.120 (0.887)
	창업농(N=33)		3.33±1.137	
	가족경영(N=33)		3.36±1.342	
농업 관련 교육 기회 부족 (컨설팅, 멘토)	승계농(N=43)	2.87±1.306	2.72±1.241	0.485 (0.617)
	창업농(N=33)		3.00±1.346	
	가족경영(N=33)		2.94±1.368	
노동력 부족(상용, 임시)	승계농(N=43)	4.35±0.956	4.49±0.883	0.830 (0.439)
	창업농(N=33)		4.30±1.045	
	가족경영(N=33)		4.21±0.960	
판매망 확보(마케팅)	승계농(N=43)	3.80±1.253	4.02±1.205	1.273 (0.284)
	창업농(N=33)		3.73±1.206	
	가족경영(N=33)		3.58±1.347	

응답자들은 농업경영에 있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63.3%)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관련 교육을 받거나(9.2%) 생산기술 능력을 확보(4.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직거래나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3.7%), 전반적인 농업경영의 정보습득이나 애로사항을 네트워크 활동(3.7%)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자금, 노동, 농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 기술, 유통 등 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의 부족과 이에 대한 대안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6. A study on how to solve the problems of in agricultural management

구분	빈도(%)
정부 지원사업 활용	69(63.3)
교육	10(9.2)
차별화된 생산기술 능력(품종 등)	5(4.6)
유통개선(직거래, 온라인)	4(3.7)
모임 등의 네트워크 활동	4(3.7)
기타	17(15.6)
합계	10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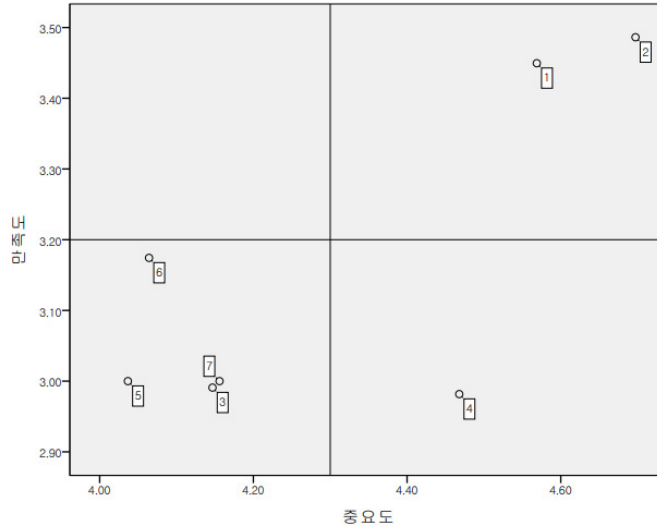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 중요도-만족도(IS) 분석 결과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현재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중요하다고 응답(4.30)하였으나, 실제 해당 사업의 만족도(3.20)는 중요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I사분면인 ‘유지’는 중요도가 높으면서 만족도가 높아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의 진입과 성장 단계를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 해당한다. 이는 청년 농업인에 있어서 두 사업의 중요도가 타 사업에 비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II사분면인 ‘집중’은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결과로 판단된다.

제III사분면인 ‘저순위’는 중요도가 낮고 만족도도 낮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기는 하되 자원 투입에 우선순위는 급하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경영 실습 임대농장’, ‘농업경영 컨설팅(컨설팅 지원)사업’,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도출은 귀농·귀촌인 정책에 대한 수요가 일반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정책 수요에 비해 적고, ‘경영 실습 임대농장 및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사후적 영농 정착 관련 지원사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IV사분면인 ‘과잉’은 중요도가 낮지만 만족도가 높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이 해당한다. 농지 지원사업의 중요도가 낮은 이유는 본 연구의 응답자 중 이미 농지를 확보한 농업인(승계농, 가족경영)의 비중(69.7%)이 창업농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족도는 높으므로 이는 기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업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범례 : 1. 청년 후계농(청년 창업농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
 2.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4.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5. 경영 실습 임대농장
 6. 농업경영 컨설팅(컨설팅 지원)사업
 7.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Fig. 3. The results of IS(Importance – Satisfaction) for young farmers fostering support policy

요약 및 결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부 사업의 영역이 기존 생산기술 중심에서 주택, 복지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용자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를 농업인, 농지, 경영컨설팅 분야로 유형화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중요도-만족도(IS)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I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현재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은 중요하다고 응답(4.30)하였으나, 실제 해당 사업의 만족도(3.20)는 중요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I 사분면인 '유지' 영역에는 '청년 후계농(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으로 나타났다. 제 II 사분면인 '집중' 영역에는 해당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제 III 사분면인 '저순위' 영역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경영 실습 임대농장', '농업경영 컨설팅(컨설팅 지원)사업',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제 IV 사분면인 '과잉' 영역에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이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청년 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해당 사업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금액 및 상환 기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과거와 달리 농식품 분야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에 맞추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본 및 기술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고위험(Risk)성 투자 비용이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업경영이 개별경제 중심에서 기업적 성격의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의 집중도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상응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자금, 농지, 기술 분야 외 주택, 문화, 복지 등에서 영농 정착 지원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제도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금, 농지,

기술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지원정책으로는 중장기적인 영농 정착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정책과 함께 실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간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청년 농업인들의 선호와 요구를 고려하여 청년 농업인 친화 특구를 조성하고 일자리, 주거 공간,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하혜영, 2021). 이와 함께 전남 고흥군의 사례와 같이 은퇴농(혹은 고령농)이 소유한 유휴 농업시설을 예비농업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여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경험해 보고 창업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시스템을 구축(이수행, 2018)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이를 영농 정착지원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청년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영농 정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방안)들을 개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영이양제도는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이춘수 외, 2019), 이양자, 승계자, 승계자-이양자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 구축의 한계로 경영이양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지식재산권 활용, 기술이전 등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 기반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및 관련 법률·제도·사업과 실제 경영·재무·회계 등에 대한 지원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생산에 중점을 둔 스마트농업에서 유통·가공·소비 등 전체 과정의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한 디지털농업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때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귀농인의 농촌 지역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 투자, 재무 등의 실질적 농업경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자부담과 (정부)농업정책자금, (농협)농업종합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의 융자금을 통해 조달한다. 자금조달 방법 및 자금지출 교육 등의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였으나 한계점이 있다. 연구 대상인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의 선발에 있어서 자료의 미흡으로 해당 사업의 정량적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을 포함한 더욱 많은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청년 농업인의 실질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강혜정. 2017. 청년 농업인·후계인력 육성 방안.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 23-39.
2. 광승진, 정영미, 김진묵, 배경재, 임미경. 2011. ISA를 적용한 국회전자도서관 품질 평가와 개선방안 수립.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 327-343.
3. 김기흥. 2016.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충남연구원.
4. 김정호, 김정희, 박해청, 금경연. 2016.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 등 창출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사)환경농업연구원.
5. 나승일, 이용환, 김진모, 강경중, 김종우, 마상진. 2004)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영농 정착 실태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4) : 1-19.
6.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7. 농림축산식품부. 2021, 청년 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8. 마상진, 김강호. 2010. 신규 취농 진입장애 요인과 영농성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33권 제4호 : 1-18.
9. 마상진, 김남훈. 2019.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42권 제1호 : 27-49.
10.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 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807.
11. 소순창, 이창섭, 한형서. 2019.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행정연구. 33(1) : 119-144.
12. 이수행, 이상훈, 김정호, 박정지. 2018.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방안. 정책연구 2018-28. 경기연구원.
13. 이춘수, 강창수, 양성범. 2019.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조사. 유기농업학회지. 27(2) : 111-132.
13. 임소영, 김정섭, 이실, 김관수, 유도일, 이병훈. 2016.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인력육성 사업군 심층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하혜영, 김예성. 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Vol. 85.
15. Joanna Tonge, & Susan A, Moore. 2007.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for marine-park hinterlands: A Western Australian case study. Tourism Management. 28(3) : 768-776.
16. Martilla, J.A, & James, J.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 77-79.